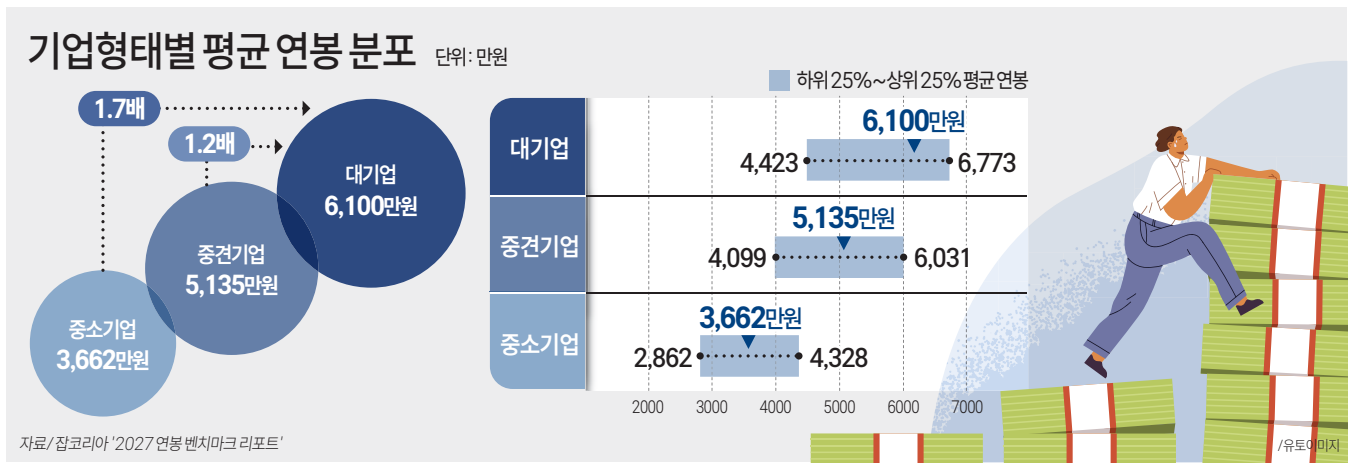
# 청년 외면에 외국인 채용도 큰 부담… 中企 구인난 '이중고'

m-커버스토리

## 고용시장의 딜레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복지 등 중소기업 자체 한계 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감소, 구직 의사가 없이 쉬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2014년 당시 934만명에서 지난해엔 797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은 27만5000명에서 42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1년 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

**청년 인구 934만 → 797만명 감소**
**'쉬었음' 청년 27만 → 42만명 증가**
**공공·대기업 선호에 中企 취업 외면**
**소득·주거·복지 통합 지원책 절실**

또 새 직장을 얻기위해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청년들은 국가(공무원)·공공(34.4%), 대기업(28.7%)을 주로 선호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선 인재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025년 기준 13~34세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가운데 중소기업(4.3%)과 벤처기업(1.7%)은 자영업·창업(12.6%)보다 인기가 덜하다.

보다 높은 임금, 더욱 양질의 복지 수준을 찾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어서다.

잡코리아가 최근 발간한 '2027 연봉 벤치마크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대기업이 6100만원, 중견기업이 5135만원, 중소기업이 366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기업은 중견기업의 1.2배. 중소기업의 1.7배였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중간인 50% 연봉 범위는 대기업이 4423만~6773만원, 중견기업이 4099만~6031만원으로 상당 부분 겹쳤다. 중견기업 상위 25% 경계(6031만원)는 대기업 평균과 69만원 차이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 상위 25% 경계(4328만원)는 대기업 하위 25% 경계(4423만원)보다 낮았다. 결과적으로 중견기업은 연봉만으로도 대기업 인재와 경쟁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직급, 역할 범위, 근무 조건 등 연봉 외에도 보상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어렵게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확보에 더욱 애로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하우 전수도 어려워져 개별 기업 차원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복지 전 과정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 사업주 장려금 확대 ▲근로자 지원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장려금 및 소득세 감면 지원 확대 ▲도심 임대주택 물량 확보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입주 우대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공급 물량 확대 ▲지자체 청년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입주 우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복지 바우처 신설 ▲장기 재직(3·5·10년)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대표적이다.

**◆청년 안오는 中企 일자리 대안은 외국인력 뿐인데**

청년 채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댈 곳은 외국인력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고용해왔다. 그러다 주문이 밀릴 때면 어쩔수 없이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써 공장을 추가 가동하기도 했다. 바로 바로 인력 수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의 또다른 기업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를 채용했다 걸렸다는 소문을 전해듣고 해당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특정활동(E-7) 비자 인력을 해외에서 새로 들여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

**中企 83.6%, 내국인 구인난 호소**
**복잡한 비자 절차에 인력 수급 차질**
**언어 장벽·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입국 전 한국어·직무교육 강화 시급**

그런데 해당국으로부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고, 국내 출입국사무소도 업무가 주먹구구식이어서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총 체류 외국인 293만1688명 가운데 11.7% 수준인 34만4387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체류 비율은 2021년 당시 19.9%까지 치솟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비자인 E-7은 9월 말 현재 국내에 9만1827명이 활동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베트남이 1만6739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1만3985명), 중국(9898명), 인도(1695명), 미국(1370명) 순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8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한국어 의사 소통 어려움'(60.2%)과 '숙식비 등 인건비 부담'(28.2%) 때문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70.6%)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 상황(15.4%) ▲동료 간 갈등 발생(4.1%)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낮은 의사 소통은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져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3개월 미만 외국인은 4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3년 이상은 돼야 내국인의 94.9%까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장을 역임한 한 기업인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채용하자마자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전 일정 수준의 한국어 소통 능력과 해당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올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인건비는 급여(218만1000원), 잔업수당(42만7000원), 부대비용(4만7000원)을 포함해 265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국인 대비 96.1% 수준이다. 여기엔 숙식비는 뺀 것으로, 올해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1명에게 주는 숙식비는 매달 평균 43만원 정도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건비와 숙식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이 받는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면 '임금·복지 격차… '서 계속

## 中企 청년 70%, 2년 내 퇴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서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를 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다 그만둔 청년(191명)의 재직기간은 절반이 훌쩍 넘는 58.9%가 1년 미만이었다. '2년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4.6%로, 10명 중 7명 이상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소기업을 떠난 셈이다.

퇴직 사유(복수응답)로는 '낮은 임금 수준'이 41.4%로 가장 많았다. 전체 구직자까지 포함해 일자리 선택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는 절반이 훌쩍 넘는 64.7%가 '임금 수준'이라고 답해 돈을 많이 주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고려 요소 중 '기업 규모'는 9.7%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구직 청년들이 원하는 최소 월급(세전 기준)은 63.4%가 '250만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27.8%는 '300만원 이상'을 바랐다.

**청년 퇴사 주원인 '낮은 임금'**
**大·中企 임금·복지 격차 확대**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시 63.3% 수준이었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더욱 벌어져 2025년엔 60.1%까지 하락했다. 2025년 기준 평균 임금은 대기업이 663만1000원, 중소기업은 398만6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복지 수준도 2010년 당시 60.8%에서 2024년엔 34.6%로 떨어지며 더욱 벌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청년고용 감소는 청년 인구 축소,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성장기회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일률적인 채용보조금보다는 임금 및 보상격차 완화, 직무훈련, 경력개발, 중소기업 간 공동인재 활용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韓 성장률 3%대 후반 전망에도… 청년 취업자 48개월째 '감소'

**IMF·KDI 등 성장률 전망 상향**
**청년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비정규직 비중 46% 역대 최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국내외 기관이 늘었다. 3%대 후반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 고용 상황은 녹록지 않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작년 수준인 1%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48개월째 감소 행진을 기록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3.3%에서 3.9%로 올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5%에서 3.7%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2%에서 3.8%로 높여 잡았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은 2023년 1.5%, 2024년 2.2%, 2025년 1.1%에 그친 바 있다.

문제는 성장세가 일자리 창출로 전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은 9월(11만3000명)과 10월(13만9000명) 등 두 달 연속으로 10만 명대 초반에 그쳤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성장률이 1.1%에 불과했던 지난해(19만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2.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청년 취업난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10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로 19만6000명 줄며 48개월 연속 후퇴를 보였다. 이들 고용률도 42.9%로 30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 원인으로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꼽힌다. 기업이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고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업무방식 급변이 신규 채용을 가로막는다.

이 같은 상황에 자영업으로 눈 돌리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지난 8월 29세이하 자영업자 수는 1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19.4%) 증가했다. 30대 자영업자도 65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7.7% 증가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 가운데 창업 동기로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를 꼽은 비율은 21.7%로 지난해(17.9%)보다 3.8%포인트(p) 올랐다.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인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322만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6%(148만2000명)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비중도 7.3%에서 27.4%로 크게 높아졌다. 넷에 하나는 이른바 '알바'인 셈이다.

청년층 고용 불안은 소득격차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의 소득은 4.1% 증가하는 데 그치며 전체 가구 평균(4.5%)을 밑돌았다. 39세이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로 전체 평균에 못 미쳤다. 올해 1분기에는 39세이하 가구만 마이너스(-1.7%)를 기록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청년층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초점을 둔다. 첫 취업 지원, 일 경험-취업연계 강화 방안,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사회진출 초기 자산형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